

# 민주, 韓 시정연설에 “12조원짜리 대권 놀음” 비판

“자화자찬...尹 내란수괴 닮아”  
박찬대 “35조 규모 추경 필요”  
우원식 “할 일과 말 일 구분을”  
韓 “민생 등 현장 요구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12조원짜리 대권 놀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안은) 미사여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민생 관련 예산은 4조6000억 정도에 불과하다. 도탄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 대신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을 말했으나 조기 집행 실적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추경안 증액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부족하면 2차 추경을 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된다. 그 과정에 대선이 있

니까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한 권한대행이 이번 시정연설에 나온 것을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자리만 가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한 권한대행에게서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며 “연설 내용에 온갖 자화자찬을 도배해 놓은 꼴이 윤석열 내란수괴와 닮았다”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도 곧이곧대로 들릴 리 없다”며 “지금 한 대행의 마음속에서는 추경 타이밍보다 대선 타이밍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내부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한 대행이 협조를 요청한 올해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날을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한 대행의 추경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실명을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겨냥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할 시점으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 대행은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추경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인공지능)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덕수(앞)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민주 대선 후보들, ‘文 기소’에 “검찰 해체”

“정치보복·부당 기소”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뇌물죄 기소에 대해 일제히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추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라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라며 “검찰은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정치 검찰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분노가 치민다”라며 “석방된 내란수괴에게는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 검찰은 그대로이다”라며 “검찰,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

를 똑똑히 보여주는 역시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딸로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고 직격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은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관련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전진숙,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수사 촉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사진)은 24일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남양주 소재 ‘온 요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와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노인 요양원까지 손대며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불모로 삼고 있다”며 “김건희 일가의 비윤리적, 비상식적 이윤 추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온 요양원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서울의소리’ 보도를 인용하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온 요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약 97억 원”이라며 “어르신께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식비, 돌봄 서비스 비용이 김건희 씨의 공간을 채우는 것인지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 “대법, 극우외풍에 위축되지 말아야”

‘더 여민’, 나선거법 재판 토론회  
“검찰 ‘이재명 죽이기’ 보복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어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가 없는 심리를 일제히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최종심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한 뒤 이날 2차 심리 기일을 여는 점을 현안으로 두고 열린 토론회다.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벌써 2차례 기일이 잡히는 등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가 나온 터다.

‘더 여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개시된 최근의 정치적 상황을 진단했다.

안 의원은 “12·3 내란의 본질은 정적 제거를 위한 국가권력의 정치보복이었다”며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정치검찰은 보복을 이어가며 우리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으며 ‘이재명 죽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직선거법 상고심의 경우 극우세력이 사법부를 향해 무차별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에 위축되지 않고 헌법적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법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역시 축사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대법원에 정치적 판단을 강요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일련의 시도들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극우세력은 대법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해야 한다거나, 혹은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와 파기자판 가능성이 따져본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의 법리와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돼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은 대법원이 ‘정치행위’를 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전원합의체가 이런 무리수를 돌지는 의문”이라며 “만일 악의적으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 법원은 더는 법치국가의 사법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서삼석 “노후헬기 재제작 도입 495억 편성” 비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24일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추경안 중 ‘산림 헬기 도입·운영’ 사업에 대해 “50여 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 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추경안 심의에서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추계도 2년 전인 2023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20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연구개발(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



·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고, 지급 시기 역시 적절해야 전염병 예방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예산 추가 배정을 촉구했고, 산불 진화 대원의 장비 부실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산림청의 헬기 임차 사업을 비롯한 필요 사업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